7조 떠받친 개미의 분루… 공매도에 결국 '두 손'

아듀 2019 증시결산

❷ 코스닥 7% 하락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실패
개인 순매수 사상최대기록 전망
6일 하루 외국인 순매수 2001억

10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35포인트(0.45%) 오른 2098.00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5포인트(0.12%) 내린 627.11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올 한해 정부가 추진했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은 '실패'로 평가된다. 개인투자자가 7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며 사상 최대의 순매수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의 순매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지수 조정이 뼈아프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2001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 일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는 2007년 이후 일곱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개인의 눈물, 하향선 그린 코스닥

7조 1000억원. 개인이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 이전까지 최대 순매수 기록은 2016년의 5조7000억원이었다. 남은 보름 여간 개인이 1조 4000억원 이상 순매도하지 않는다면 신기록은 수립된다. 개인투자자는 이처럼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다.

개인의 매수세는 코스피시장과 정반대 양상을 띠며 눈길을 끌었다. 이달 6일까지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7조 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847조원 수준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84.8%에 달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각각 9.4%, 4.9%에 불과했다.

수익률은 비관적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코스닥지수는 7.0% 내려 앉았다. 정부의 시장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시장에 관심이 높아 연 초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지금쯤 평균 7.0%가량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바이오주에 여러 악재가 불거지며 일희일비하는 투자자가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현행 금융정책에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다. 공매도를 향한 비판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대외적 불확실성은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고하저'의 증시부진이 이어지며 바이오주 역시 하반기에 여러 악재가 불거지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형 바이오주가 임상 결과에서 연이어 쓴맛을 보며 코스닥시장 전체가 지수의 상승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지수는 꾸준히 내려갔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정책 기대감이 작용해 900선을 넘었다가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다. 종합해보면 올해 코스닥지수는 552~678 사이에서 움직였다. 지난 4월 678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하다 8월 6일 552를 기록하며 최하점을 기록했다. 이후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 중이다.

◆상장 호황기 끝?

상장 호황기는 끝이 났다.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하면 총 59개다. 이달 중 상장이 확정된 4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63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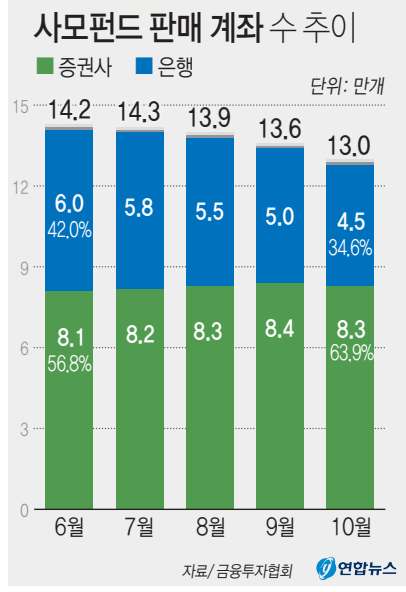
이달 중 상장이 확정된 4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73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향한다. 지난해 총 811곳의 기업이 상장 문턱을 넘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치다. 거래소가 올 초 목표치로 내세웠던 신규 상장 기업 100곳 달성엔 실패했다. 지난 1월 거래소에서 진행한 코스닥 상장 수요 설문 조사에서 주관사 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업 수는 200여 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되자 상장에 몸을 사린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면 내년엔 IPO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시리즈펀드, 판매사까지 징계?' 논란

1개 펀드 쪼개서 사모판매
증선위서 농협銀 제재안 상정
현행법상 판매사 문책 어려워
당국 무리한 제재에 비판도



11일 일명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시리즈펀드는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공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서 판매했던 것을 말한다.

당초 현행법상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최근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로 판매사에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다. 문제는 해당 상품인 NH농협은행의 펀드들이 공모회피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됐던 만큼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처벌규정도 모호하다는 데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펀드들은 초고위험 파생상품인 DLF와 달리 위험등급 5등급의 채권형펀드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1일 공모펀드 규제 위반(시리즈펀드에 따른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농협은행 제재안을 논의한다.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이를 사모펀드 시리즈 형식으로 판매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했다.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탓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DLF 사태로 판매사에 대해 무리한 제재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먼저 소급적용 논란이다.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모회피방지법은 농협은행의 판매가 모두 끝난 이후인 2018년 5월에 시행됐다.

다음은 모호한 규정 적용이다.

당국의 논리대로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를 내야하는 '주선인'으로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다.

만약 가사 인수인으로 봐서 이를 적용하더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은 없게 된다.

당국은 OEM펀드와 시리즈펀드 판매사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협의의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규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협은행이 폭넓게 적용한 규정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는 현행법상 판매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명확한 법규와 선례가 없어 위반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안을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제재할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만약 펀드판매사에게 증권신고사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앞으로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과 제출여부에 관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열린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3000억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포럼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소개
내년 3월까지 100건 서비스 지정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다.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열린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생활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등 우리 삶의 모든면을 변화시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신사업·신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소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년 3월까지 100건의 서비스 지정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규제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핀테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핀테크 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결제·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금융혁신 인프라를 확대해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우수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금융회사 핀테크 랩을 설치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국내 금융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가 상호간의 핀테크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외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금융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